

#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

이희수 중앙대교수 ‘혁신도시 성장 거점화’ 토론회서 주장

지역 균형발전 위해 ... 지난해 한명도 안 뽑은 공공기관 2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나주 빛가람 도시 등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춰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35% 채용을 법으로 의무화해 지방 대학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희수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30일 서울 세브란스 빌딩에서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역개발학회 공동 주최로 ‘혁신도시의 지역 성장 거점화 전략’을 주제 삼아 열린 ‘지역발전정책 릴레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35% 이상을 지역 인재에 할당하게 돼 있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45%가 지역 인재 채용 비율이 35%에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지방대 인재를 지난해 단 한 명도 뽑지 않은 공공기관이 20.3%나 됐고, 단 한 명만 채용한 곳도 7.7%였다.

지역별로는 부산은 공공기관 20곳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4곳, 경남은 13곳 가

운데 4곳(30%), 울산은 6곳 가운데 2곳(33%)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이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시행한 공공기관의 이전만 현실화됐을 뿐 지역 인재 양성과 채용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의 경제는 활성화하기를 바라면서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것은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자원이 줄고, 대학교조개혁까지 실시돼 지방 대학을 둘러싼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도 말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ffirmative action)로 ‘지방 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35% 이상 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기될 수 있는 공공기관 구성원의 지역 편중에 따른 학연·지연 우려에 대해서는 ‘지역’의 개념을 특정 시·도로 한정하지 않고 ‘권역별’로 확대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해 기업·대학·연구·공공기관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여건과 주거·교육·문화 같은 정주 환경까지 갖춘 미래형 도시를 가리킨다.

지난해 현재 14만9570명이 주민 등록해 목표 인구 26만7000여 명의 56%를 달성했고, 대상 면적의 92.2%의 분양률을 기록한 바 있다.

류 연구위원은 혁신도시를 두고 여전히 ▲계획대비 직원 이주율 저조 ▲가족 동반 이주율 저조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간 교육·연구협력 미흡 ▲산하기관·협력업체 동반 이전 저조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라면서 ▲혁신도시라는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 혁신 생태계 구축 ▲커뮤니티 빌딩에 대한 지원 강화 ▲혁신도시 산업발전 기반 확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대학 간 협력 강화 ▲기업 생애 전기에 걸친 성장·임직 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반성없는 전두환 ‘자화자찬’

회고록 내용 보니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은 1980년대 초반에서 중반 사이 격동의 현대사를 중심으로 써여 있다.

그러나 회고록은 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기술된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진 부정적인 사실에 대해 미화하거나 변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두환 회고록’은 모두 2000 쪽에 달하며 ▲10·26사태 이후 대통령이 되기까지 과정을 담은 1권 ‘혼돈의 시대’ ▲대통령 재임 중 국정수행 내용을 서술한 2권 ‘청와대 시절’ ▲성장 과정과 군인 시절·대통령 퇴임 후 일들을 담은 3권 ‘황야에서’ 등 총 세 권으로 구성됐다.

◇“박근혜 자질 부족”=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권 도전 의지를 보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역량으로는 무리라는 판단에 대권의 꿈을 접으라는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회고록에 따르면 2002년 2월 당시 이회창 총재가 이끌던 한나라당을 탈당해 3개월 뒤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한 박근혜 의원은 대권 도전을 시사하며 전 전 대통령에게 지원을 부탁했다.

전 전 대통령은 “박근혜 의원은 내게 사람들을 보내 자신의 대권 의지를 내비치며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해왔다”면서 “나는 생각 끝에 완곡하게 그런 뜻을 접으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박 의원이 지닌 여건과 능력으로는 무리한 욕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박 의원이 대통령이 되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봤고, 실패했을 경우 ‘아버지를 욕보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또 전 전 대통령은 10·26 사건 직후 박정희 정권에서 각종 비행을 일삼았던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씨(1912~1994)를 전방 군부대에 격리 조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 전 대통령은 “최태민씨가 더 이상 박정희 대통령 유족의 주변을 맴돌며 비행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격리를 시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10·26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자금 9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돈 가운데 3억5000만원을 수사비에 보태달라며 돌려줬다고 증언했다.

◇6·29의 내막=전 전 대통령은 6·29 선언을 준비할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선제 개헌을 건의할 테니 크게 노해 호통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

“박근혜 역량 부족해 대권 꿈 접으라 했다”

최규하, 대통령직 승계 과정 안팎에 아쉽다고 씩어

1980년대 격동의 현대사 본인 미화·변명 일색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대권 도전 의지를 보이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전 전 대통령은 그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대권의 꿈을 접으라는 뜻을 전달했던 것으로 회고록에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방문한 모습.

/연합뉴스

구했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직선제를 비롯한 민주화 조치를 극적으로 수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전 전 대통령에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정치적 효과를 최대한 높이려는 의도였다는 것이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다.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6·29 선언 전 27일 청와대 별관에서 마지막으 로 만났는데 미국 유학에서 돌아온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만 배석했다.

◇최규하 침묵 아쉬워=전 전 대통령은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이 10·26 사건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과정과 10개월간의 재임 기간에 대해 끝까지 침묵한 채 해명하지 않아 아쉬웠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규하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승계와 재임 기간 활동에 대해 끝까지 함구한 데 대한 개인적 아쉬움도 털어냈다.

그는 “내가 12·12 때 겁박했다거나, 그 여론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몰고 갔다거나 하는 음해를 받는 사실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 말소 없이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느꼈다”고 적었다.

◇軍 동원 안 한 이유는=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재임 중 군(軍)을 동원하는 일을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 데다 직선제를 하더라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6월 민주항쟁은 서울대생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과 4·13 호헌조치, 연세대생 이한열 군 사망 사건 등으로 견장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전국 38개 시·군에서 1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시위에 참여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을 요구했었다.

그는 “나는 임기 중 군대를 동원하는 일을 끝까지 피하고 싶다. 그뿐만 아니라 비상조치를 취하게 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장애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은 당시 직선제 개헌에 반발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선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한편, 개헌 촉구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한 양동작전에 돌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19일 오전 10시30분 군 관계자들을 소집해 병력 출동을 지시했다. D-데이는 6월20일 오전 4시였다.

이날의 출동명령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양동전술이었다. 올림픽 때문에 내가 군대를 동원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상황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세력에게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망설이는 노 대표에게 파국에 이르기 전에 직선제를 조속히 수용하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뜻이었다. 일석이조를 노린 양면 동시공격이었다”고 고백했다.

/연합뉴스

## 전남도내 경로당 ‘노인 소득창출 공간’ 거듭난다

전남도내 경로당이 공동작업장 운영을 통해 노인 소득창출 공간으로 거듭난다.

전남도는 지난 24일까지 한 달여간 1시·군 1경로당 공동작업장 지원사업을 공모, 17개 시·군 20개 경로당을 시범 운영 경로당으로 선정했다.

1시·군 1경로당 공동작업장 시범사업은 그동안 어르신들의 쉼터 공간이자 단순 사람방 수준으로 운영돼온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동작업장은 전남도의원과 복지 보

여구 손질·특산품 생산 등

20곳 공동작업장 시범운영

야 등 관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목포 옥암2차휴면시아경로당은 통발 작업, 여수 월호경로당은 어구손질, 영광 몽강경로당은 모시옷 생산, 영암 비래산 경로당은 엿기름·매주 생산, 완도 대야리경로당은 특산품해조류 제조 등의 사업을 지역 업체 및 마을기업 등과 연계해

판로 체계를 확보해 추진한다.

사업비는 경로당 공동작업장별로 운영경비 300만원이 지원되며, 4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철 전남도 노인장애평과장은 “경로당 공동작업장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 안정된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사를 의뢰,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농장에 서만 입식이 가능해진다.

서은수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이번에 발생한 H5N8형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강화해야 수평전파 차단이 가능한 만큼 입식 전에 농장 정밀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입식도록 한 것”이라며 “축산 농가에서는 입식 전 소독을 철저히 해 축사 내 AI 바이러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전남도 AI 확산 방지 사전입식승인제 강화

오리농장 병아리 입식 축사 정밀검사 수평전염 차단

전남도가 최근 장흥, 곡성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오리농장 병아리 입식 때 축사 정밀검사를 통한 사전입식승인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오리농장에서 입식하려면 해당 계열사와 농장에서 방역점검표에 따라 사전 방역 점검 후 시군에 입식을 신청하고,

시군에서는 입식 신청농장을 방문해 철저한 현장 점검 후 이상이 없으면 계열사와 농장에 입식을 승인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입식승인제를 강화함에 따라 시군이 입식 신청농장의 방역 점검 결과 적합 판정이 나오면 축사 시료를 채취해 관찰지역 동물위생시험소에 검

# 착한보청기

# 보청기

#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충-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 · 정행진 · 임정승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